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K정치혁신연합당		
정책번호 1	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한 대중주도 사회 실현	분	야* 정치
<p>○ 목 표</p> <p>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해 대중이 모든 분야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이 주역이 되는 대중주도 사회 실현</p> <p>○ 이행방법</p> <p>대의민주제를 보완하기 위한 지역당과 국민발안제를 기본으로 하는 직접민주주의와 숙의민주제를 제도화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시민 플랫폼 정당을 만든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국민 홍보, 언론 보도, 정책과 현장 민원 청취, 24시 국민의 소리 수렴 등 쌍방향 정치활동을 통한 혁신적인 정당체제를 도입한다. 이는 인터넷과 플랫폼이 시민들에게 친숙한 매체로서, 소수 시민들의 제안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론화하여 정책을 반영하게 하기 위함이다.</p> <p>○ 이행기간</p> <p>정당 후보자 당선 후 시행, 플랫폼을 구축하여 항시 유지되도록 구성</p> <p>○ 재원조달방안 등</p> <p>공약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한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 예산 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적극 삭감하여 활용 예정이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조세 확대, 국채 발행, 지출조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재원 확보 및 활용 예정</p>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K정치혁신연합당		
정책번호 2	국민 참여 K-오디션을 통한 새로운 정치문화 조성	분 야*	정치
<p>○ 목 표</p> <p>참여민주주의의 확대, 정당민주주의와 정치참여를 확대하여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새로운 혁신 K-오디션 공천시스템을 도입.</p> <p>○ 이행방법</p> <p>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부터 정당의 밀실 정치가 아닌 시민의 손으로 시민의 대표자를 선택한다. 각 후보자는 시민후보로서 국민 참여 K-오디션(투명하게! 공정하게!) 방식에 지원하고 시민의 선택을 받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당 정치는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반영되는 다당제에 기반을 둔 합의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 민심이 의석수에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로의 개혁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헌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사법부가 행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진정한 의미의 3권 분립을 확립한다. 새로운 인재 발굴과 정치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며 위성정당을 지양한다. 그리고 중앙당 중심의 독점을 막고 시민들이 해당 지역의 지방정당을 통한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심이 반영되도록 한다. 이러한 안정적인 다당제의 정착을 통해 의회제도와 정치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치개혁을 실현한다.</p> <p>○ 이행기간</p> <p>제22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거부터 바로 시행, 선거제도의 개혁과 개헌은 약 10년 이상 예상</p> <p>○ 재원조달방안 등</p> <p>공약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한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 예산 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적극 삭감하여 활용 예정이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조세 확대, 국채 발행, 지출조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재원 확보 및 활용 예정</p>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K정치혁신연합당		
정책번호 3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통한 차별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분 야*	노동
<p>○ 목 표</p> <p>세대별·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철폐, 일자리 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으로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며 노동기본권 확립, 부당노동행위 근절, 정리해고 남용 방지 등 노동자의 권익보호 강화</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번째로 청년고용 확대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꾸준히 증가할 공공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에 적정임금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현장의 저임금 고위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개선하여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근로장려세제 등 청년노동자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 두 번째로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벤처기업의 창업과 고용확대를 지원하고, IT 및 BT, 로봇, 2차전지, 환경·신재생에너지, 정밀기계, 첨단부품·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세 번째로 비정규직에 의존하는 성장전략을 폐기하고 파견근로를 엄격하게 제한하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제를 실시한다. 정규직 채용이 기본이 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여 비정규직 남용을 원천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한다. 공공부문이 발주하는 정부사업에서 적정임금을 준수하고 직접고용 비율을 늘려나간다. - 네 번째로 혁신형 중소기업을 통해 미래지향적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주력한다. 지역 간 격차와 소외를 극복하여 지역 맞춤형 직업교육, 지역별 창업지원 활성화 등을 중심으로 하는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고용과 복지, 직업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 이행기간

정당 후보자 당선 후 시행, 항시 유지되도록 구성

○ 재원조달방안 등

공약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한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 예산 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적극 삭감하여 활용 예정이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조세 확대, 국채 발행, 지출조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재원 확보 및 활용 예정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K정치혁신연합당		
정책번호 4	상호이익이 되는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준비	분	야* 통일외교통상
<p>○ 목 표 상호 이익이 되는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 준비</p> <p>○ 이행방법</p> <p>- 햇볕정책 계승 평화와 화해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한다.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무력도발을 일절 허용하지 않고, 흡수통일을 반대하며, 남북 간 화해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햇볕정책을 계승한다. 주도적인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평화공존의 남북관계를 정착시켜 통일을 지향한다.</p> <p>- 교류협력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 남북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신뢰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교류를 강화한다.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한다.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대북지원을 확대한다.</p> <p>○ 이행기간 정당 후보자 당선 후 시행</p> <p>○ 재원조달방안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비용 감축, 국가 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통한 관련 예산 증액</p>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K정치혁신연합당		
정책번호 5	차별없이 모두가 신명나게 누리는 복지	분	야* 보건복지
<p>○ 목 표</p> <p>실업, 빈곤, 질병 등으로부터 최대한 보호받는 복지국가 건설</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 빈곤 해결과 든든한 노후 보장 노후에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적연금 제도개혁 추진, 노인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특히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생활프로그램의 확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현실화하여 안정된 노후를 보장한다. 취미, 봉사, 생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실버 매니저를 도입하여 은퇴 후 생활을 지원한다. - 의료비 부담과 의료격차 해소 소득 수준별 병원비 상한제를 강화하고 실질화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대형병원 위주 지원정책을 지방의 중소 지역병원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전환한다. 영유아 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서비스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어르신 요양 서비스 시설 확충과 서비스 인력에 대한 적정임금을 보장하여 인간적인 품위가 유지되는 어르신 요양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 - 시민주거안정 공평한 세금부과,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후분양제 등을 도입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다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세입자에 대한 주거급여확대로 전환하여 서민의 주거비용을 줄인다. 공공임대주택 총량을 확대하고 다양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빈곤층 및 서민층까지 확대·공급한다. 			

○ 이행기간

정당 후보자 당선 후 시행

○ 재원조달방안 등

다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지원 감축 및 서민주거비용 확보, 공약의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의 전략적 배분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K정치혁신연합당		
정책번호 6	IT·BT 세계일류국가 도약과 모두를 위한 과학	분 야*	과학기술정보통신
<p>○ 목 표</p> <p>경제성 위주로 지원·운영되는 과학기술 정책에서 벗어나 경쟁력과 연구기반을 강화하여 IT·BT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구축 <p>연구 효율성과 민주성을 보장하는 과학기술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기초과학에 대한 국가책임성을 강화하고 연구자에 대한 실질적·안정적 지원을 통하여 연구자들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북돋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패와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연구 환경 조성 <p>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과학과 기술의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경제성 위주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폐지, 연구 행정의 간소화 및 연구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중복 연구를 허용하여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고, 평가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서류상의 단기성과를 위한 형식적인 연구가 아닌, 실패의 경험과 그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구성과가 축적될 수 있도록 한다.</p> <p>○ 이행기간</p> <p>정당 후보자 당선 후 시행</p> <p>○ 재원조달방안 등</p> <p>공약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한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 예산 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적극 삭감하여 활용 예정이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조세 확대, 국채 발행, 지출조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재원 확보 및 활용 예정</p>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K정치혁신연합당		
정책번호 7	기후보호와 모든 생명이 함께 살아가는 나라	분 야*	환경
<p>○ 목 표</p> <p>생태환경의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p> <p>○ 이행방법</p> <p>- 원전 비중 감소와 저탄소 시대</p> <p>에너지 정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 구속력 있고 포괄적인 기후변화대책을 수립·이행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원전 비중 감소 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적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친환경 클린에너지 정책을 추구한다. 국제기준에 걸맞은 탄소규제를 정책목표로 삼으며,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를 강화한다.</p> <p>-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나라</p> <p>대기 오염원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대기환경 사회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배출원의 낮춤을 위해 석탄 및 화력발전을 과감히 축소한다. 교통수송 분야를 대중교통 중심 체계로 전환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을 적극 확충한다. 국경 없는 대기환경의 관리를 위해 중국 등 동북아와의 실질적 환경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화한다.</p> <p>- 4대강 재자연화</p> <p>4대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수질 문제, 구조물 안전성 문제, 주민 피해 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복원방안을 마련한다.</p> <p>○ 이행기간</p> <p>정당 후보자 당선 후 시행, 향후 지속적인 관리 필요</p>			

○ 재원조달방안 등

공약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한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 예산 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적극 삭감하여 활용 예정이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조세 확대, 국채 발행, 지출조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재원 확보 및 활용 예정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K정치혁신연합당		
정책번호 8	민주시민과 창의적인 인재 양성하는 정의로운 교육	분	야* 교육
<p>○ 목 표</p> <p>교육이 불평등의 원인이 아닌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기회균등, 공공성 강화, 교육재정 확대를 추진하여 모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받으며 학력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함</p> <p>○ 이행방법</p> <p>- 직업교육과 공교육 혁신</p> <p>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발휘되는 교육체계를 구축한다. 창의교육, 인성교육을 중시하며 학교와 지역 및 기업의 연계 교육으로 학생 역량을 극대화하고, 일 자리에 필요한 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을 혁신한다. '직업중심 고등학교'와 '직업중심 대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p> <p>- 차별 없는 교육 구현</p> <p>학력, 학벌, 경제력, 신체적·정신적 장애, 성별, 지역, 문화, 인종 등 차별 없이 모두가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공평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 직장교육, 지역교육, 평생교육을 통해 직업 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과 고용을 연계하여 교육의 지역격차를 해소한다.</p> <p>-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p> <p>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실질적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소득장학금을 확대하고 요건을 현실화한다. 대학은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도록 하고, 공공기숙사 건립 등을 통해 대학생의 주거비용을 낮춘다.</p> <p>○ 이행기간</p> <p>정당 후보자 당선 후 시행, 향후 지속적인 관리 필요</p>			

○ 재원조달방안 등

공약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한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 예산 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적극 삭감하여 활용 예정이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조세 확대, 국채 발행, 지출조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재원 확보 및 활용 예정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K정치혁신연합당		
정책번호 9	국제사회 균형외교와 강한 안보	분 야*	안보
<p>○ 목 표</p> <p>한반도 평화와 민족생존을 위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적인 통일외교정책을 바탕으로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적인 외교·안보 노선을 지키며,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한다.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확고히 한다.</p> <p>○ 이행방법</p> <p>- 실리적 균형외교</p> <p>국익우선의 경제외교를 위해 통상교섭 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의 평화번영을 위해 중국이 적극 참여하는 다자안보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법을 제정하여 해외공관의 재외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p> <p>- 강한 안보</p> <p>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전시작전권을 조기에 환수하고, 국군의 단독작전능력을 강화하여 강군을 육성한다. 3군의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 육군 중심의 전력구조를 해·공군 중심으로 전환하고,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을 증강시켜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압도적 공군 전력을 구축한다.</p> <p>○ 이행기간</p> <p>정당 후보자 당선 후 시행</p> <p>○ 재원조달방안 등</p> <p>공약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한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 예산 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적극 삭감하여 활용 예정이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조세 확대, 국채 발행, 지출조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재원 확보 및 활용 예정</p>			

선거명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명	K정치혁신연합당		
정책번호 10	여성이 주역이 되는 평등한 시대	분야*	여성
<p>○ 목 표</p> <p>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양성평등 사회를 지향하며, 여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문화를 개선한다.</p> <p>○ 이행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정치참여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데 있어 특정성별이 전체의 60%이상을 차지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당직을 배분하는데 있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여성인재를 발굴하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는 정치적 제도와 문화를 개선한다. - 여성의 권리로서의 결혼, 임신, 출산, 보육 저출산·고령화 사회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보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시스템을 강화한다. 임신과 출산, 보육이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남성 육아수당 등을 높여 남성의 육아 책임성을 강화한다. - 여성 일자리 창출과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 출산과 보육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여성의 사회복귀를 도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p>○ 이행기간</p> <p>정당 후보자 당선 후 시행</p> <p>○ 재원조달방안 등</p> <p>공약의 우선순위와 시급성을 바탕으로 한 재원의 전략적인 배분이 필요. 예산 검토를 통해 불가피한 예산을 제외하고 낭비되는 예산을 적극 삭감하여 활용 예정이며,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조세 확대, 국채 발행, 지출조정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재원 확보 및 활용 예정</p>			